
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
한국형 ‘당뇨병 예방과 관리 정책’ 전략

2017. 3

대한당뇨병학회

I. 배경 및 현황

- **(전 세계 핵심 보건이슈, 당뇨병)** 사망원인 5위이자 막대한 국가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당뇨병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
 - 30세 이상 성인 유병률 매년 증가, 현재 7명중 1명(480만명, 2014년)이 당뇨병, 2020년 당뇨병으로 건강보험 치료를 받는 환자규모는 36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
 - 당뇨병 위험군(공복혈당장애)은 830만명, 30세 이상 성인 4명중 1명
 - 당뇨병의 연도별 진료비 급격히 상승. 2015년 현재 1조8천억원



- **(국가적 대책 없으면 당뇨합병증 부담, 도미노 직면 우려)**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률 매우 낮아, 합병증과 동반질환 관리 필수
 - * 당뇨병 환자의 치료목표 혈당에 도달하는 비율은 25%, 환자 10명중 4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음
 - 국가적 차원에서 당뇨병 예방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
- **(심뇌혈관질환법 제정 추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 역부족)** 심·뇌혈관 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바, 당뇨병 질환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다른 당뇨합병증의 종합적인 관리를 포괄할 수 없어, 당뇨병으로 인한 당면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
 - *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2016년 5월29일 제정, 올해 5월30일 시행 예정

II. 목표 및 3대 정책 전략 제안

“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”

목표

- 당뇨병 대란, 당면과제 해결을 통한 관리정책 초석 마련
- 당뇨병 대비, 예방 연구 지원을 통한 단계별 접근
- 당뇨병 대안,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한국형 예방치료 관리 모델 구축

< 3대 추진전략 제안 >

[전략 ①] 당뇨병 대란, 당면과제 우선적 해결

- 합병증 관리를 위해 당뇨병 환자 대상 교육상담 급여화 추진
- 당뇨병 환자 차별문제 해소를 통해 소아청소년 학습권 보장·성인 환자의 고용 안정성 도모
- 정부주도의 체계적인 전 국민 캠페인 및 ‘세계 당뇨병의 날’ 국가적 행사로 진행

[전략 ②] 당뇨병 대비, 예방 연구 국책 사업 활성화

- 당뇨병 조기 검진을 통한 고위험군(공복혈당장애) 관리 강화
- 당뇨병 예방연구 사업의 확대와 지속성 확보
- 한국형 당뇨병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

[전략 ③] 당뇨병 대안,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통일시대 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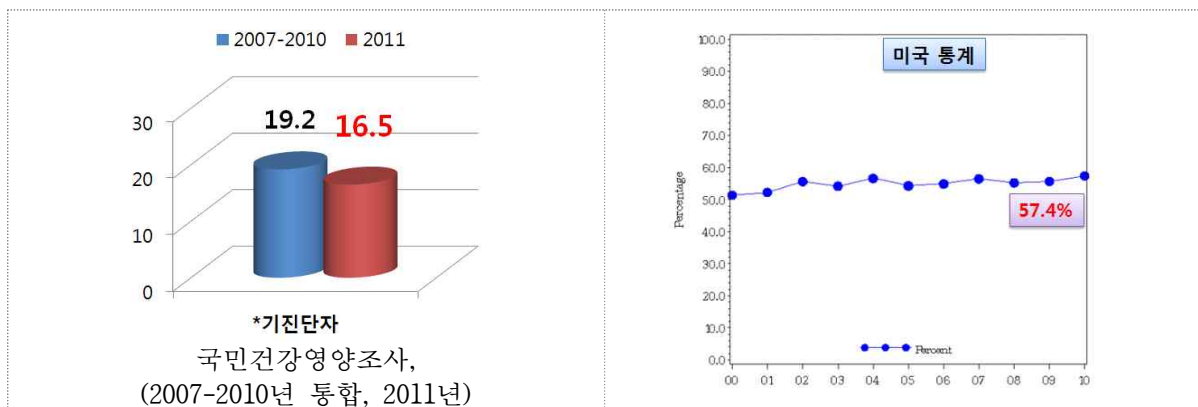
- 국제적 리더십 강화 및 아시아 지역 당뇨병 컨트롤타워 역할
- 남북보건의료협약의 조속한 통과 및 타결
-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이끌어갈 상설기구 설립 추진

Ⅲ. 당뇨병 극복을 위한 3대 접근 전략

① 당뇨병 대란, 당면과제 우선적 해결

당면과제 1 당뇨병 평생관리의 첫단추, 교육상담 급여화 추진

- 당뇨병에서 환자 및 가족 교육상담은 당뇨병 관리의 기초이자,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필수요건
 - * 당뇨병 교육상담은 관리방법(식사, 운동요법, 인슐린주사, 저혈당대처, 혈당 측정 등)을 습득시켜, 환자 스스로 당뇨병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치료 과정임
- 당뇨병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가계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
 - * 당뇨병 환자 총 진료비는 연간 1조 8,000억원, 지난 5년 사이 33.3% 증가(2015년). 사회경제적 비용은 2조 7,700억원(2012년) 소요
 - 젊은 당뇨병 환자 증가, 고령화로 인한 유병기간 증가로 합병증 위험과 사회 의료비 지속적으로 증가
- 철저한 교육상담을 통한 환자들의 적극적인 관리로 합병증 예방이 가능함에도 국내 당뇨병 환자의 교육 경험은 20%에 불과



[한국과 미국의 당뇨병환자 교육참여율]

-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의료비절감효과가 검증된 당뇨병 교육상담에 대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관건. 이를 위해 교육상담의 급여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
- 당뇨병 환자는 진단시점부터 매년 정기적인 교육상담이 필요. 특히 소아·청소년 환자, 임신성 당뇨병, 인슐린 주사 환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의 경우는 교육상담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함

당면과제 2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차별적 요소 개선

□ (소아·청소년 환자)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요구됨

- 1형 당뇨병은 소아·청소년기에 발병,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생활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고려돼야 함.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제도적인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
- 1년에 1,000번 이상의 인슐린 주사를 학생 스스로 투여해야 하고, 중증 저혈당과 같은 응급상황 대처를 비전문가인 학생과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현행 법적 모순 발생
 - *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경우, 개정을 통해 소아당뇨 영유아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허용하고, 어린이집 종사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른 투약을 허용함
- 소아·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행 「학교보건법」 개정이 시급하나,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
-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「학교보건법」 개정을 위해선 다음 요소를 반영하여 당뇨병이 학교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

- ▲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보건교사의 인슐린 주사 합법화 및 중증 저혈당 대비해 학교의 글루카곤 안전보관 허용
- ▲ 현행 관련법과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, 투약의 결과에 대해 보건교사의 면책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
- ▲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 배치, 과대 학급 2인 배치, 소아당뇨병 환자 및 특수 환자의 안전보장과 돌봄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선행

□ (성인 환자) 직장 내 차별과 고용기회 박탈 방지위한 대책 마련

- 당뇨병 진단 유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승진 무산 및 업무 차별, 심지어 해고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
- 당뇨병은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, 고용주의 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고용기회마저 박탈되는 경우가 많아, 본인의 질환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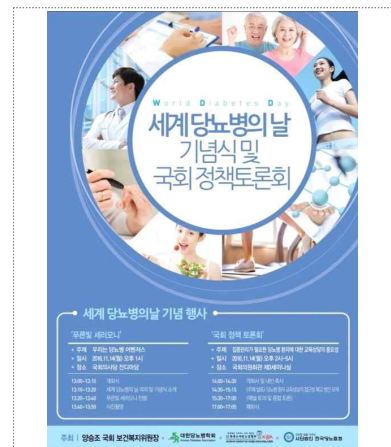
-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은 화장실에서 혈당검사와 주사를 놓는 등, 자신의 질병이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으로, 이는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매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
- 따라서 당뇨병 환자가 질병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을 비롯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제정이 요구됨



당면과제 3 정부행사로 ‘세계당뇨병의날’ 지정, 대국민 캠페인 주도

□ 학계와 의료현장 노력만으로 역부족,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

- [학회 주로 인식개선 활동] 유엔(UN)과 세계보건기구(WHO), 세계 당뇨병연맹(IDF)이 공동으로 매년 11월14일 ‘세계당뇨병의날’ 제정,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대한당뇨병학회가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며, 국민인식 개선과 여러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왔음
- [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] 그럼에도 당뇨병 환자 10명중 3명이 환자인지도 모르고 방치하는 실정이며, 치료받고 있는 환자 중에 합병증예방에 매우 중요한 혈당·혈압·콜레스테롤 모두를 관리하는 환자는 16%에 불과
 - 당뇨병은 단순 질환이 아닌 보다 수많은 합병증을 야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심각성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캠페인 활동이 미비함
- [세계당뇨병의날 정부행사 지정] 당뇨병 예방 및 적극적인 관리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해야 함



2 당뇨병 대비, 예방 연구 국책사업 활성화

□ 당뇨병 조기검진 통한 고위험군(공복혈당장애) 관리 강화

-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, 집중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악화되는 만성질환으로, 발병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
- 특히 당뇨병 전단계(공복혈당장애 또는 내당능장애)를 관리하는 것은 당뇨병의 사회경제적인 비용부담 증가추세에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단초임.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인식 개선과 이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

□ 당뇨병 예방연구 사업의 확대와 지속성 확보

- [한국당뇨병예방사업단 발족] 미래 당뇨병예방을 위해 한국인에게 적합한 ‘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개발’을 목표로 질병관리본부,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‘한국인 당뇨 예방 연구’를 2016년부터 국책연구과제로 진행 중
- [장기적 연구 및 확대 필요] 전국 10개 병원 12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, 2018년 종료될 예정이나, 제대로 된 우리나라만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방연구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

□ 한국형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

- [근거 기반 당뇨병 예방 서비스 확산으로 당뇨병 발생률 감소 효과] 당뇨병 위험지수·예측 모형 개발 통한 단계적 정책 접근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임
- 이를 통해 향후 당뇨병 예방 정책의 수립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‘당뇨병 예방 프로그램’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지원이 요구됨

3 당뇨병 대안,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통일시대 대비 남북협력

□ 국제적인 리더십 강화 및 아시아 지역의 당뇨병 컨트롤타워 역할

○ 아시아 표준의 한국형 당뇨병 관리 대책 마련 및 보급

- 우리나라 당뇨병 관련 연구와 학문적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
- 세계당뇨병연맹(IDF) 동양인 최초 IDF 차기 총회장국으로서 2017년 12월부터 유엔, WHO와 함께 전 세계 당뇨병환자의 관리·예방 및 치료 고취 캠페인을 한국이 선도해야 함

☞ 「세계당뇨병의날」(매년 11월14일) 정부주최 행사를 통해 당뇨병 관리 및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높여 국가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

□ 남북 공동 협력 통한 당뇨병 예방 전략 마련 필요

○ 분단 72년, 남북한 건강 격차 감소위해 만성질환 분야부터 협력 고려

- 현재 북한의 청장년층은 대기근 시절에 성장기를 거쳐,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

* 독일의 경우, 서독이 통일 수십년 전부터 동독의 보건의료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, 통일 이후 동·서독 간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20여 년 동안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됨

○ '당뇨병'부터 연구자 레벨의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남북보건 의료협약의 조속한 통과 및 타결

- 현재 북한의 당뇨병 유병률은 낮은 편이나, 북한이탈주민의 체장인슐린 분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, 통일 후 식생활 변화에 따라 북한의 당뇨병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높음

* 북한 내 당뇨병 검진과 치료 현황은 열악해 고혈당측정 등의 검진법 보급이 미비하며, 인슐린 및 치료제 구입의 어려움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잘 관리되고 있지 못함

- 북한 대상 당뇨병 치료제(인슐린)의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당뇨병 실태조사, 공동학술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

○ 비감염성질환 및 건강증진에 대한 공통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통일 시대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야 함

IV. 기대 효과

건강적 측면	유병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30년까지 당뇨병환자 4% 감소 ▶ 2030년까지 공복혈당장애 10% 감소
	치료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30년까지 당뇨병 치료환자 혈당조절(당화혈색소) 7%미만 비율 50%대로 증가 (현재 43.4%)
	합병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당뇨병 합병증 지연 및 감소를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
국민삶 측면	의료 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담 없이 당뇨병 교육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개인 맞춤 관리 가능
	권리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당뇨병 환자 차별문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학업과 사회생활 영위
	신뢰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당뇨병관리 글로벌 리더십강화 및 미래 대비하는 정부의 당뇨병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및 제도 수용성 제고

“ 당뇨병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, 치료와 관리의 어려움, 합병증 위험... 그 어떤 위협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, 이를 위해 당뇨병학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”